알맹이 없는 서구 '화정아이파크 백서' 빈축

공무원 1명이 제작, 사건기록 짜깁기 수준…"자화자찬식 구정 홍보만"
사고 원인 분석·다양한 대책 제시한 광주소방본부 백서와 '대조적'

광주시 서구청이 최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전반을 다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대응백서(이하 백서)'를 발간했으나 '알맹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아파트 붕괴사고를 총체적으로 돌아보는 백서임에도 그간 사건 기록들을 짜깁기해 나열한 수준인데다 구체적인 평가, 별다른 대책이나 정책 제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인 서구청이 대응에 미진했던 점은 쏙 빼놓고 구정을 홍보하는 내용만 실은 터라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구청은 지난 3일부터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백서를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서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백서를 제작했다. 관련 법에서는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은 대규모 재난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 또는 재난상황 등을 기록하여 관리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재난에 관하여 재난수습 완료 후 수습 상황과 재난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견 등을 기록한 재난백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예산 2000만원을 투입해 백서를 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에 완성본을 내놓았다.

백서는 총 260페이지 분량으로 크게 사고 개요, 붕괴원인 및 피해자 수습, 사고 수습·복구, 대응과정 진단·평가, 전문가 제언 등 내용을 다뤘으나, 이중 대부분의 내용은 사고 수습 과정을 별다른 평가·개선대책 분석없이 나열하는 데 할애했다.

'대응과정 진단·평가' 장은 단 3페이지만 기술했으며, 그나마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피해자 지원 등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했다"는 내용으로 귀결됐다. 진단·평가를 통해 명시한 개선 대책으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체계를 일률적으로 구축하고 각 유관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책임·권한을 강화하자는 것 뿐이었다.

'제도개선·시책사업 추진' 장은 아예 구정 홍보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 장에는 현 서구청장이 추진 중인 민원 정책 '바로 문자 하랑께'를 머리에 올리고 '안심 귀가길 시스템 확대 운영', '서구 재난안전체험관 운영' 등 붕괴사고 대책과 무관한 내용을 실었다.

또한 전문가 감수는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 단 1명에게서 두 차례 받은 것이 전부였다.

더욱이 붕괴사고 당시 피해자 가족이 사고현장으로 뛰어드는 등 현장 통제가 미비했던 점, 인근 상인이 수개월동안 공사장 잔해물 낙하 민원을 넣었으나 묵살한 점 등 행정적 대응이 부실했던 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서는 담당 공무원 1명이 전담해서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수집 또한 그간 공무원끼리 공유했던 정보를 종합해 짜깁기하는 방식이라 애초에 한계가 뚜렷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백서는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소방본부가 발간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31일간 소방활동 백서'와 비교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광주소방본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료 수집, 현장 대원 인터뷰, 설문조사 등을 거쳤으며 재난대응 과정에서 잘했던 점, 개선점 등을 분리해 상세히 기록했다. 전문가 감수 및 제언을 받고 긴급구조통제단의 평가를 거쳐 통합 지휘체계 마련을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 첨단 소방장비 투입, 대응 인력·처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백서 자문을 맡았던 송창영 교수는 "백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구체적인 건축 붕괴 원인 규명, 재난 행정 개선책, 법·매뉴얼 개정 등 대응체계가 전혀 기록돼 있지 않다"며 "백서는 강점, 단점, 기회, 위협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SWOT 분석'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데, 자화자찬만 늘어놓은 것은 백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도 "이번 백서는 행정 대응, 유관 기관 대처, 언론 보도 등을 일기장처럼 나열했을 뿐, 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상세 분석과 추후 대응 방안이 빠져 있다"며 "건설업계부터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재난 전·후를 면밀히 분석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제작 계획이 없다고 하니 서구청이 나서서 만든 것"이라며 "사고 경과와 수습 과정을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만든 터라 분석이나 대책 제시는 주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개선 등은 대부분 중앙부처가 추진하는지라 자치구 단위에서는 제안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내 성폭력 의혹 전남대 교수 해임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희롱 등 성폭력을 한 의혹을 받은 전남대 교수가 해임됐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학내 인권센터 조사 결과에 따라 학내 구성원들에게 성 관련 비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모 단과대학 A 교수를 '해임' 징계했다.

A 교수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대학 인권센터는 비공개 조사에 착수,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함께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를 전수조사해 확인했다.

그 결과 신고자 외 추가 피해자가 있는 사실 등을 확인해 징계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2차 피해 발생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학 구성원 제보에 따르면 A 교수는 언어 성폭력 행위 등을 상습적으로 행한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 관계자는 "인권센터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징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11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1주기 추모식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사고 현장 앞에서 붕괴사고 1주기 추모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추모식은 사고 희생자들을 알리고 추모하는 것을 넘어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 의식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될 계획이다.

협의회는 11일 오전 9시부터 사고 현장 인근에 분향소를 열 계획이다.

추모식에서는 '안전 결의대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하루 동안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을 쉬면서 안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다.

또 추모식 중 광주시와 서구, HDC현대산업개발이 지금까지 사고 수습 경과와 앞으로 계획을 브리핑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정호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으로 다시는 공사현장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며 "추모식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사·수사관 사칭 보이스피싱 증가 '주의보'

"검찰입니다. 명의도용 사건 수사 중인데 당신 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받아 지정된 안전계좌에 입금하십시오.", "○○지검 박○○검사 입니다. 범죄조직이 당신 명의의 계좌를 무단 개설해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좌 해킹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뱅크에서 대출을 받아 지정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최근 검사나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해 수 천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사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일 최근 수사기관을 사칭해 사기를 벌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관 사칭형 범죄의 수법으로는 '피해자 명의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국가기관(가짜)에서 지정하는 안전계좌로 입금하라'는 방식이 기본 유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 ▲명의도용 성매매사건으로 구속영장 신청 ▲해외결제 문자 발송 후 명의도용·자금세탁과 연관됨 등이 대표적 시나리오로 꼽히고 있다.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계좌로 받은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송금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사기 방조 및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전달책 A(25)씨를 붙잡아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021년 3~4월 피해자 4명으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4595만원으로 가상자산(이더리움)을 산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한파·폭설의 뒤끝 고드름 낙하 주의

5일 광주시 북구 임동성당 인근 보행로에 고드름 낙하와 빙판길을 주의하라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폭설이 그친 지 열흘이 넘었으나 이곳은 여전히 제설이 되지 않은 상태다.

/김진수 기자 jeans@

"교육과정 5·18 명기하라" 광주 시민단체 이틀째 규탄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에도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면 삭제〈광주일보 1월 4일자 6면〉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비롯한 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날 '역사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성명서를 내고 "국민을 기만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작태를 즉시 멈출 것"을 촉구했다.

4·19혁명공로자회 광주호서지부, (사)광주전남6월항쟁, 광주민청동지회, 긴급조치9호 동지회, 오월민주여성회, (사)오월어머니집, (사)윤상원기념사업회 등이 공동으로 낸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김광동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이배용을 임명했다"면서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이 5·18민주묘지를 방문해 '민주와 인권의 오월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방명록에 남겼음에도 엄연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또다시 재해석하려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관련 광주지역 시민사회 단체들로 구성된 광주교육시민연대도 5일 성명을 내고 "연구진이 제출한 시안에 5·18민주화운동이 이미 빠져 있었다는 교육부의 해명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역사지우기를 멈추고 교육과정 개정안에 5·18민주화운동을 명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5월단체는 '의도적으로 5·18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교육부 해명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개정 교육과정에 5·18을 다시 집어 넣는 것에 대한 입장은 유지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경매,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